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3년 11월 8일(금) 조간
담당자	오지윤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(02-958-4074, jiyoon.oh@kdi.re.kr)
배포일시	2013년 11월 7일(목) 09:3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2-958-4030, press@kdi.re.kr)

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: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

- 오지윤 연구위원 -

※ 본 논문은 11월 하순 발간 예정인 『KDI 경제전망(2013. 하반기)』에 수록될 예정입니다.

1. 문제 제기

- 소비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, 따라서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
-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은 2000년에 56%였으나, 2012년에는 51%로 하락
- 이 같은 민간소비 비중의 하락은, 이른바 '내수 중심의 성장'을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.

□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수준을 다양한 소득지표와 비교하여 평가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○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작년 하반기 이후의 소비침체는 자산가격 하락,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.

※ 소득 이외의 주요 단기 요인들(자산가격, 대내외 불확실성 등)이 민간소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「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」(2013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현안분석) 참조

○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소득지표와의 비교를 시도

2. 총소득 및 가계소득과 민간소비의 증가 추이

□ 총소득(GDP)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해 온 민간소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총소득 증가세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.

○ 2000년의 (명목)민간소비와 (명목)GDP를 100으로 표준화할 경우, 2012년 민간소비는 총소득에 비해 약 2.3%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.

○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둔화의 정도는, (실질)민간소비를 (실질)GDP 추이와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에 비해 훨씬 작은 수준임(Box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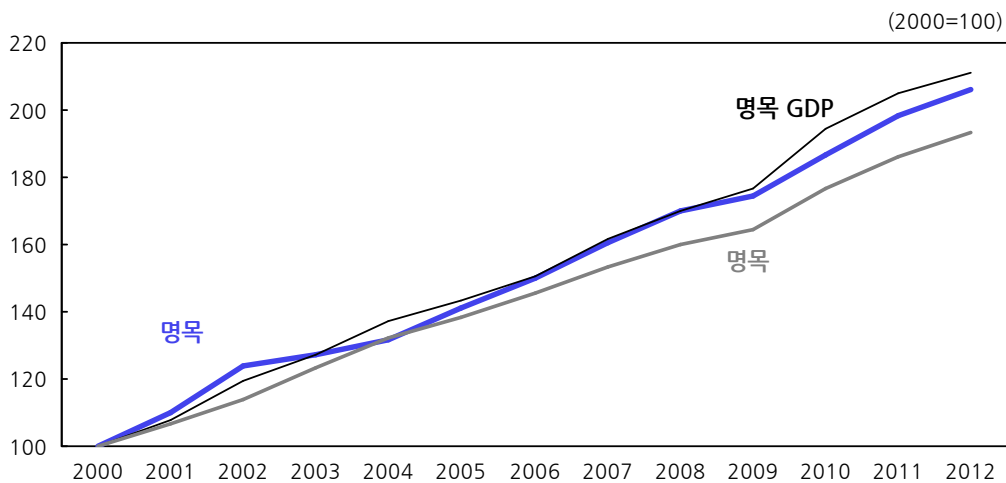
- 2000년 (실질)GDP와 (실질)GDP를 100으로 표준화할 경우, 2012년 민간소비는 GDP에 비해 약 8.4% 낮은 수준으로 명목 변수 간의 비교보다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됨.

□ 반면, 총소득보다는 가계에 환류되는 소득이 민간소비의 기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,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계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 민간소비는 오히려 '과잉소비'라고 평가될 수도 있음.

○ 동일한 방식으로 2000년의 가계소득을 100으로 표준화할 경우, 2012년 민간소비는 가계소득에 비해 무려 6.6% 높은 수준

- 2000년대 이후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현상은, 이처럼 가계소득 대비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된 데에 기인

총소득(GDP),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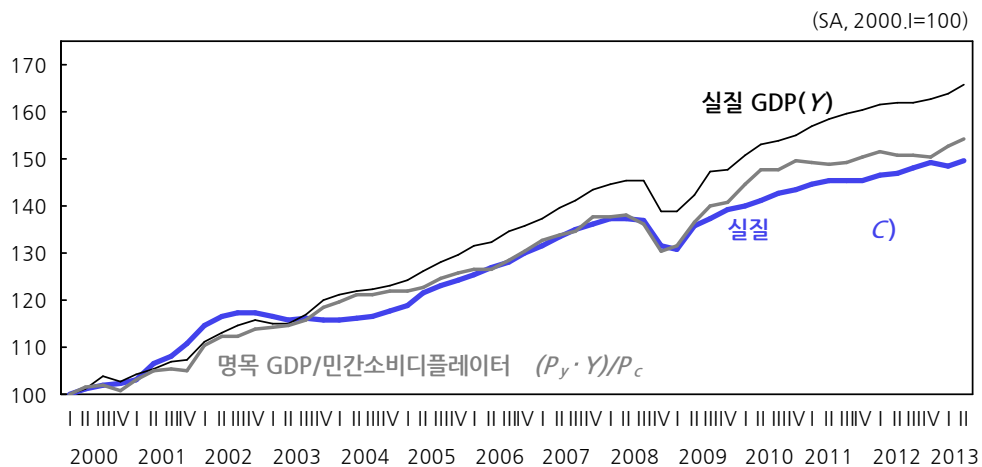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.

■ Box: 소비디플레이터와 GDP디플레이터 ■

- 우리나라의 경우, 1990년대 이후 소비디플레이터(P_c)가 GDP디플레이터(P_y)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왔음.
 - 이러한 현상은 실질GDP(Y)가 증가하는 만큼 실질소비(C)를 증가시킬 수 없음을 의미
 - 즉, 실질GDP Y 가 창출하는 명목소득은 $P_y Y$ 인 데 반해, 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실질소비 C 는 $(P_y Y)/P_c$ 로서, $P_y/P_c < 1$ 일 경우 Y 보다 작아지게 됨.
- 이처럼 두 디플레이터의 장기 추세가 다를 경우(즉, 상대가격이 항구적으로 변화하는 경우), 실질GDP(Y)와 실질소비(C)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.
 - 실질소비(C)와 비교될 수 있는 실질소득 지표로는 소비재가격(P_c)을 기준으로 한 소득($(P_y Y)/P_c$)을 고려해 볼 수 있음(아래 그림 참조).
 - 실질민간소비 C 는 실질GDP Y 를 크게 하회해 왔으나, $(P_y Y)/P_c$ 를 하회한 정도는 크지 않음.
 - 따라서 실질 변수들(C vs. Y) 대신 명목 변수들($P_c C$ vs. $P_y Y$)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임(본문 참조).

총소득(GDP),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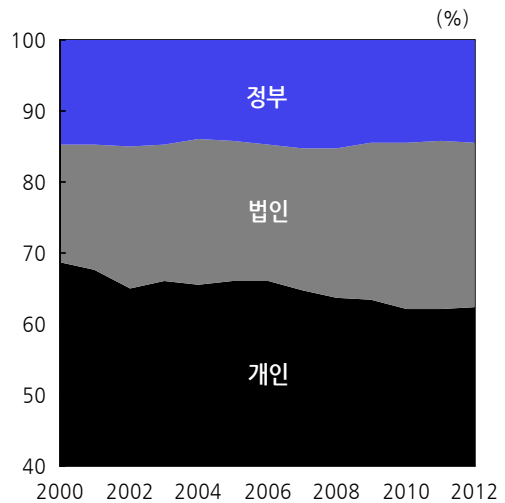
□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,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정체가 2000년대에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대부분은 기업소득의 비중 확대와 맞물려 있음.

○ 2000년 69%에 이르렀던 가계소득 비중이 2012년에는 62%까지 하락한 반면,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중 17%에서 23%로 증가

○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 추세는 여타 OECD 국가들(24개국 중 18개국)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기는 하나,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 중 하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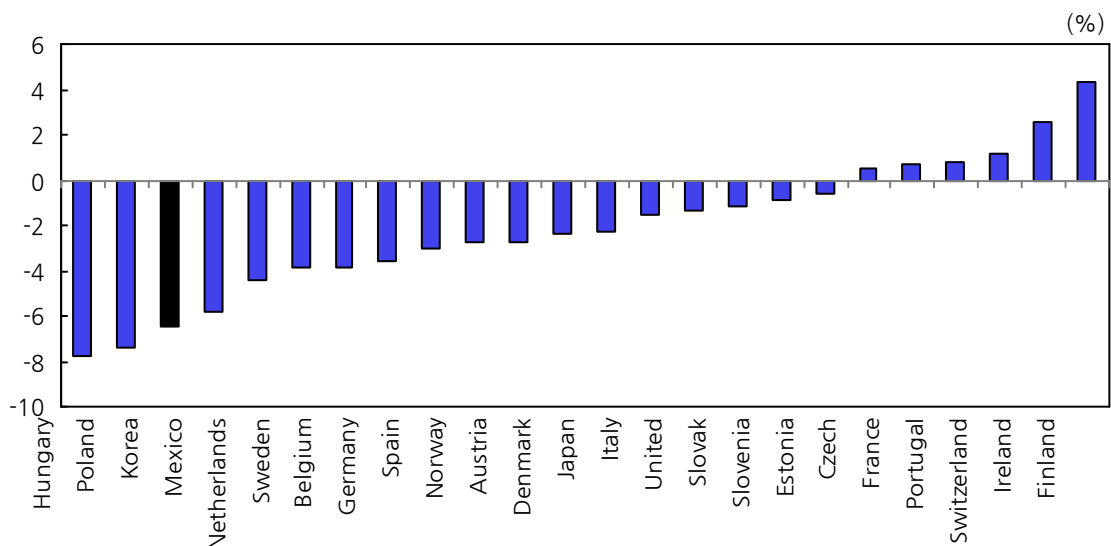
-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은 6.4%p(2012년 2000년) 하락하였는데, 이는 헝가리,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빠른 하락세임.

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증가세



자료: 한국은행

OECD 국가의 가계소득 분배율 변화(2012년 - 200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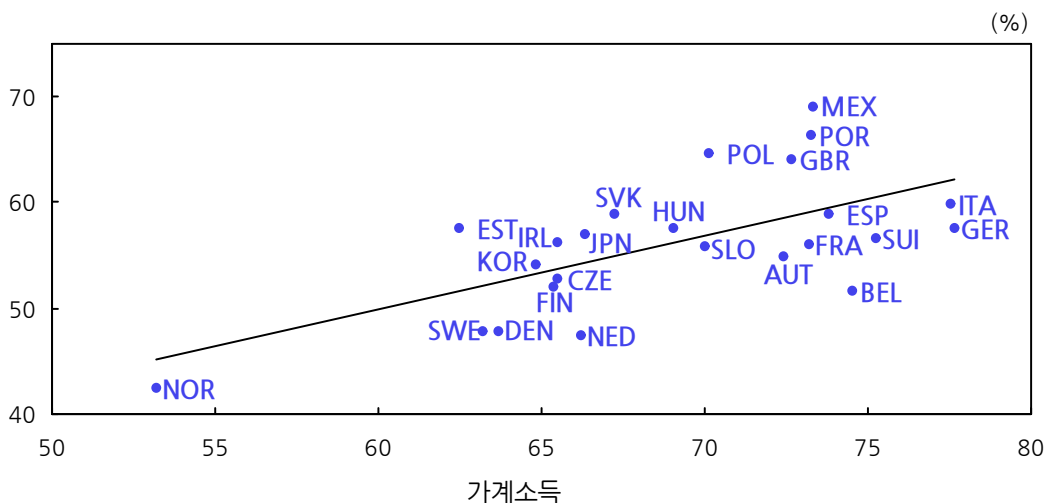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 Statistics.

3. 총소득의 부문별 배분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

- 이와 같은 부문별 소득 비중의 변화가 민간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검증이 필요
 - 이론적으로는 기업소득의 증가도 (주가 상승 및 자산효과를 통해) 기업의 궁극적 소유자인 가계의 민간소비 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음.
- OECD 24개국의 2000~12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,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.
 - 각국의 평균 민간소비/총소득 비율을 가계소득 비율에 회귀분석한 결과, 가계소득 비율이 1%p 하락할 때 민간소비/총소득 비율은 0.69%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경제 중 하나로서, 주어진 가계소득 비율에 비해서는 민간소비 비율이 이례적으로 낮거나 높은 경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.

주요국의 가계소득 비중 대비 민간소비 비중



주: 2000~12년 각국의 평균 가계소득/총소득과 민간소비/총소득.
 자료: OECD 24개국 STAT(멕시코(MEX), 헝가리(HUN), 폴란드(POL), 한국(KOR), 네델란드(NED), 벨기에(BEL), 독일(GER), 스웨덴(SWE), 스페인(ESP), 오스트리아(AUT), 노르웨이(NOR), 일본(JPN), 덴마크(DEN), 이탈리아(ITA), 영국(GBR), 슬로바키아(SVK), 슬로베니아(SLO), 에스토니아(EST), 체코(CZE), 프랑스(FRA), 포르투갈(POR), 스위스(SUI), 아일랜드(IRL), 핀란드(FIN)).

○ 각국 내에서의 시계열 변동까지 고려한 패널 분석 결과(fixed effect regression)도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율의 1%p 하락은 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율을 0.53%p 하락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.

- 관련 robust 표준오차는 0.076으로 나타나 추정치 0.53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으며, 다양한 추정방식에 대해 매우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($R^2(\text{within})=0.4417$).

□ 아울러 우리나라의 시계열 분석 결과도 민간소비는 주로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되며, 기업소득 증가가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시계열 분석 결과, 가계소득 1% 증가는 민간소비를 0.8~0.9% 증가시키는 반면, 기업소득 1% 증가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는 0.1~0.2%에 불과

□ 이상의 분석 결과는,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 이후 비교적 급속히 진행되어 온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이 민간소비 확대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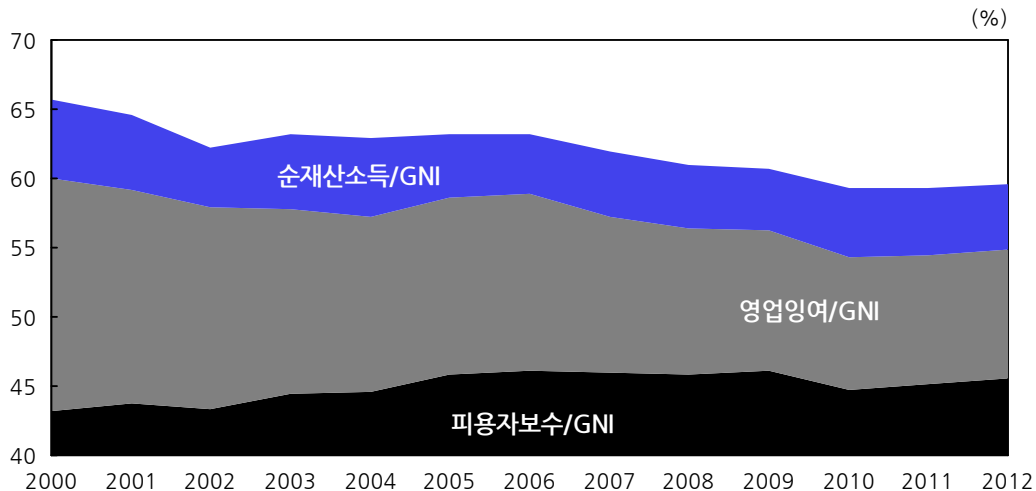
○ 예를 들어, 가계소득 비율이 현재의 62%까지 하락하지 않고 2000년의 69% 수준을 유지하였다면, 고정패널 분석결과는 민간소비 비율이 현재의 52%보다 약 4%p 높은 56%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의미

- 우리나라의 시계열적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 결과도 가계소득 비중이 69%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민간소비 비중이 55~56%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임을 시사

4. 우리나라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원인

-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소득의 구성항목 중 영업잉여 비중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,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.
- 가계소득은 임금근로자의 피용자보수, 자영업자의 영업잉여, 순재산소득으로 구성되는데 피용자보수 비중이 2000년대 이후 45%(±1%p) 내외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영업잉여 비중은 17%에서 9%로 감소하는 추세

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의 구성항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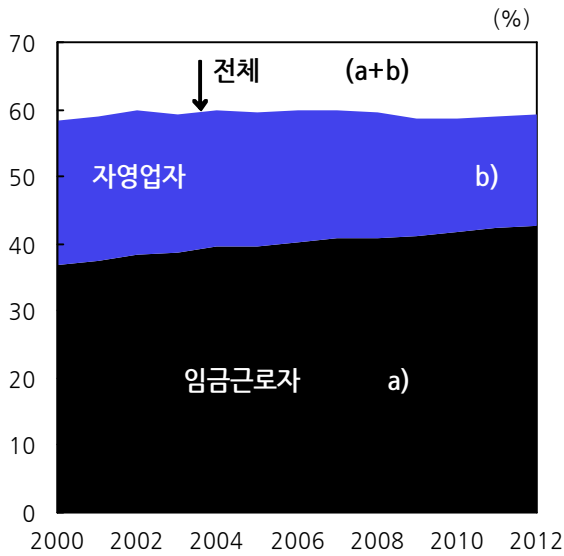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.

- 그러나 구성항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경우,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근본 원인은 자영업의 구조조정 자체보다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.
- 비임금근로자 고용률(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)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,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은 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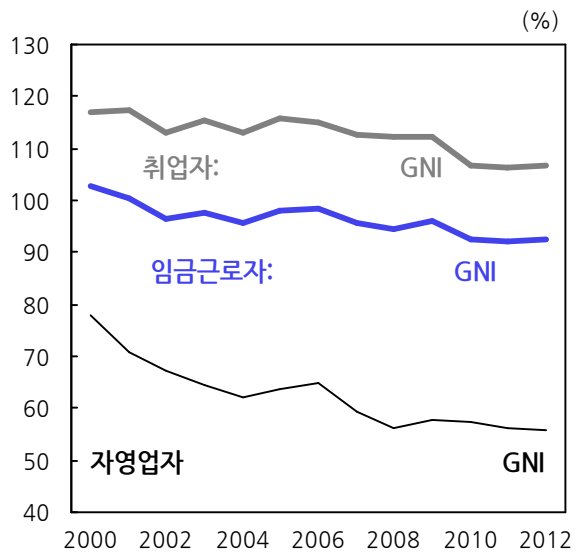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율(2011년 및 2012년 현재 28%)은 아직도 여타 선진국(2011년 11개국 OECD 평균 13%)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, 따라서 자영업의 비중 축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사료됨.
- 그러나 비임금근로자 고용률이 하락하는 만큼 임금근로자 고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고용률은 60%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, 자영업 비중 하락 그 자체가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해되기는 어려움.
 -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비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, 비임금근로자로부터 임금근로자로의 단순 이전은 오히려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
- 반면,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취업자 1인당 소득이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*에 비해 하락하고 있어,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임금 및 사업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가계소득비중의 하락 원인인 것으로 이해됨.
 -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GNI 비중은 2000년 102%에서 2012년 92%로 감소하였으며, 이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분해하여도 모두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 - 따라서 영업잉여 비중이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률과 상대적 사업소득이 모두 하락함에 따라 급락한 데 반해, 피용자보수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고용률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소득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.

*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은 전체 GNI(가계, 기업 및 정부로 배분되는 총소득)를 생산가능인구(15~64세)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는데, 이는 (취업자 1인당 소득/생산가능인구 1인당 GNI) 비율을 고용률과 곱하면 가계소득의 비중이 되기 때문임.

고용률 추이



1인당 GNI 대비 취업자 평균소득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.

5.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

- 200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우리나라 민간소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보임.
-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 증가세 둔화가 우리나라 소비증가세 둔화의 일차적인 원인
- 아울러, 경제 전반의 소득 중 가계로 환류되는 소득의 비중이 축소되는 현상도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추가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.
 - 가계소득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저축률 하락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,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음.
- 한편,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은 기업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됨.

□ 이상의 논의는 현재의 소비부진이 단기적 소비진작 대책보다 고용 확충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소득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

○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는, 예상되는 성장세 및 소득증가 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

○ 아울러 가계소득이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,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로의 소득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